

## 관 세 법

1. 관세법령상 신고의 취하와 각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출·수입·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의 취하에 대한 승인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이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 ② 수출·수입·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 ③ 세관장은 수출·수입·반송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수입·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 ④ 세관장은 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신고인에게 신고의 종류, 신고연월일 및 신고번호, 각하사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2. 관세법령상 불복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이 위법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우편물 통관에 대한 세관장의 결정사항에 관한 이의신청은 통관 우체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전달한 때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 ③ 심사청구의 재결정이 불복방법을 통지할 때 불복청구를 할 기관을 누락한 경우 당해 처분기관에 불복청구를 한 때에는 정당한 기관에 당해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 ④ 심사청구의 재결정은 해당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관세법」상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기본세율을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국제협력관세의 세율은 기본세율과 잠정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③ 별표 관세율표 중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 ④ 계절관세의 세율은 일반특혜관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4. 관세법령상 관세조사의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ㄷ.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ㄹ.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①  $\neg$ ,  $\sqsubset$   
②  $\neg$ ,  $\sqsupset$   
③  $\sqcup$ ,  $\sqsubset$   
④  $\sqcup$ ,  $\sqsupset$

5. 관세법령상 편익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물품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이다.
- ② 코모로·에티오피아·소말리아는 편익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이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출자·수입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 관세법령상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 ②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해당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③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을 받고 그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신청인이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조사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 ④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개시의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조사신청인과 공급자에 대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7. 「관세법」상 지정정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화주를 대신하여 직접 화물관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해당 토지의 교환을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 ④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8. 관세법령상 관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 ㄴ.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한 경우 납부기한은 세액을 정정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 ㄷ.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세목·세액·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ㄹ.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이 조난 선박에 적재되었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검사한 경우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고지하고 관세를 수납하게 할 수 있다.

- ①  $\neg$ ,  $\sqsubset$   
②  $\neg$ ,  $\sqsupset$   
③  $\sqsubset$ ,  $\sqsubset$   
④  $\sqsubset$ ,  $\sqsupset$

9. 「관세법」상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하게 한 경우 세관장은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
- ③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한 경우 해당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 검사 대상 물품, 검사 방법 등을 지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0. 관세법령상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액은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세관장이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은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없다.
- ② 「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은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에 해당한다.
- ③ 관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④ 관세청장은 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등의 종류, 그 밖에 관세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1. 「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법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만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면 압수할 수 없다.
- ② 관세법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고, 현행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 ③ 피의자를 조사하는 세관공무원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 ④ 관세청장은 압수물품이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지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통고하여야 한다.

12. 관세법령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수출·수입의 신고는 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하지만, 반송 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반송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 ㄴ.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부터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 ㄷ. 해외에서 부품 등을 교체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을 수입신고 하는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가격은 부품 등이 교체된 부분의 가격으로 한다.
- ㄹ.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①  $\neg$ ,  $\perp$   
②  $\neg$ ,  $\exists$   
③  $\perp$ ,  $\vdash$   
④  $\vdash$ ,  $\exists$

13. 「관세법」상 관세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한 전자신고등과 전자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허가·수리 등에 대한 교부·통지·통고 등을 할 수 있다.
- ② 전자신고등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③ 전자신고등에 대한 전자송달은 송달을 받을 자의 신청 여부와는 무관하게 할 수 있다.
- ④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14. 관세법령상 수입신고할 때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에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물품이 아닌 것은?

-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 ② 종량세와 종가세 중 높은 세액 또는 높은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는 물품을 제외한 종량세 적용물품
- ③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거래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
- ④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15.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 ②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면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
- ③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 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④ 시내보세판매장에서 현장 인도가 제한되는 사람의 명단을 세관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통보 받은 명단의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

16. 관세법령상 품목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관세청장은 법원의 판결로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 ㄴ. 관세청장은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사전심사할 때 신청인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따른 호 및 소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다.
- ㄷ. 관세청장은 심사대상물품의 성질상 견본의 제출이 곤란하지 않더라도 품목분류 심사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그 물품의 견본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ㄹ. 관세청장은 제출된 심사 신청서와 견본 및 그 밖의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17. 관세법령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납세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② 세관장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는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지만,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제1항의 수정신고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 납세자가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등 부정한 행위로 관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④ 「관세법」 제42조(가산세)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납부 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8. 관세법령상 관세의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환급할 수 없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③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 ④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 지정보세 구역에서 반출된 다음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19. 관세법령상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수입 사실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영업장에 갖추 두어야 한다.
- ② 관세청장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신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에서 거래되는 물품 중 원산지표시기준 등을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의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관세청장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의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④ 관세청장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0. 관세법령상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등을 감독한다.
- ㄴ.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과 민간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ㄷ. 납세자보호관은 본부세관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ㄹ. 관세청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9명 이내의 사람은 관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①  $\neg$ ,  $\sqsubset$   
②  $\neg$ ,  $\sqsupset$   
③  $\sqsubset$ ,  $\sqsubset$   
④  $\sqsubset$ ,  $\sqsupset$

21. 관세법령상 수입될 때 세관장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국립 또는 공립의료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 ②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된 기초설비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중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물품
- ③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수입하는 방송용의 송수신기기·중계기기·조정기기 및 이동방송차
-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22. 관세법령상 가격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운송신고 등을 한 자가 신고 또는 작성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 및 증거서류와 그 보관 기간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해당 자료 제출일부터 3년
- ㄴ.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 ㄷ. 수입거래관련 계약서에 갈음하는 서류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 ㄹ. 수출신고필증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 ①  $\neg$ ,  $\vdash$   
②  $\neg$ ,  $\exists$   
③  $\vdash$ ,  $\vdash$   
④  $\vdash$ ,  $\exists$

23. 관세법령상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 용구를 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 ②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 받으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명세서를 출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세의 면제 한도는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로 한다.
- ④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이 반입하는 물품 중 해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에서 제외한다.

24. 관세법령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은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말하고,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 ㄴ. 체납된 관세액과 내국세등의 합계가 1천5백만원(관세액 1천만원, 내국세등 5백만원)인 경우 그 체납액은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다.
- ㄷ.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는 내국세등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만,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 ㄹ.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징수하려는 세무서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내국세등을 부과한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①  $\neg$ ,  $\vdash$   
②  $\neg$ ,  $\exists$   
③  $\vdash$ ,  $\vdash$   
④  $\vdash$ ,  $\exists$

25. 관세법령상 국제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청장은 국제항이 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업무수행 등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 ② 국제무역선의 선장이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세관장은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그 선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관세청장은 국제무역선인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구에 대하여는 국제무역선이 항상 입출항할 수 있도록 국제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④ 국제항의 운영자는 국제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시설 등을 신속하게 개선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